



도농연계시대의 농촌발전전략

박 양 호 박사
(국토연구원 선임연구위원)

1. 농촌의 재발견 : 도시와 연계된 기회의 공간

오늘날 농촌의 현실은 암담하다. 농촌의 침체는 젊은 층을 중심으로 한 농업인구의 이농현상을 촉진시켜 농촌 정주인구가 지속적으로 감소할 뿐만 아니라 인구의 노령화를 심화시키는 결과를 낳고 있다. 전국적으로 농가와 농가인구도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농가인구 비중이 1990년도의 15.5%에서 2000년에는 8.7%로 급감하였으며 젊은 인력의 감소로 농촌 인구의 노령화가 심각한 수준에 이르고 있다. 2000년에 60세이상 인구비율이 도시의 경우 8.7%인데 비해 농촌의 경우 21.3%에 이르고 있다.

특히 65세 이상 농업경영주의 비중이 2010년에는 45%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러한 현

상은 인구와 기능의 수도권 집중과 도시로의 지속적인 인구이동에 크게 기인한다. 특히 수도권으로의 집중은 농촌피폐의 중요요인이다. 국토면적의 11.8%인 수도권에 전국 일자리의 절반이 모여있고 국가행정기관, 공기업, 정부산하기관의 85%, 100대 기업본사의 91%, 주요 명문대학의 65%가 모여 있다.

한국 농촌의 르네상스시대를 새롭게 열기 위해서는 농촌의 새로운 역할과 비전, 그리고 그에 부합하는 정책을 시급히 정립하고 추진해야 한다.

21세기의 농촌개발은 도시와 긴밀히 연계되어 이루어 질 때 회생의 기반이 구축될 것이다. 도시에서 얻기 힘든 독특한 자연적인 환경과 문화를 바탕으로 하여 도시로부터 인구와 경제가 유입되어 들어오고 농촌과 도시가 밀접하게 교류하는 새로운 삶의 터전으로 농촌이 재창조되어야 한다.

〈표 1〉 군부(郡部)인구의 변화추이

| 연 도 | 1980 | 1985 | 1990 | 1995 | 2000 |
|----------------|--------|--------|--------|--------|--------|
| 전국인구(A) | 37,407 | 40,420 | 43,390 | 44,554 | 45,985 |
| 군부인구(B) | 16,211 | 14,247 | 12,073 | 6,892 | 5,512 |
| 군부인구비율(B/A, %) | 43.3 | 35.2 | 27.8 | 15.5 | 12.0 |

자료 :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보고, 각년도

2. 선진국의 사례: 일본과 영국의 농촌개발동향

선 진국의 농촌개발 동향을 일본과 영국을 통해 볼 수 있다. 대체로 양국은 농촌을 둘러싼 환경이 판이하지만 농촌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기대라든가 농촌에 대한 정책방향은 상당한 공통점이 있음을 발견할 수 있다. 먼저 양국의 농촌현실을 보면 다음 점에서 뚜렷한 차이가 있다.

첫째, 일본의 농촌인구는 계속 줄고 있지만 영국의 농촌은 인구가 늘고 있다.

둘째, 일본의 농촌주민들은 여전히 동질적인 속성을 유지하고 있으나 영국의 농촌주민 구성은 상당히 이질적이다.

셋째, 일본에서는 농업노동력의 감소에 따라 미경작농지가 늘어나는 등 농촌 토지이용의 비효율이 문제가 되고 있지만 영국에서는 인구와 기능의 유출에 따른 도시 토지이용의 비효율이 크게 부각되고 있다.

현재의 일본은 1900년대 초반의 영국과 비슷한 여건에 있다고 할 수 있다. 지금까지는 도시로의 인구유출에 따라 농촌지역의 과소화가 진행되어 왔지만 도시생활에 염증을 느끼고 전원생활을 경하는 도시민들이 증가하고 있어서 이들의 욕구를 적절하게 수용함으로써 농촌지역을 활성화하고자 하고 있는 것이다. 반면에 영국은 현재 일본이 추구하는 다자역거주지역이 이미 오래 전에 실현된 상태이며, 현재는 오히려 지나친 전원지향이 문제점으로 대두되고 있는 실정이라 하겠다.

그러나 이러한 차이에도 불구하고 일본과 영국의 농촌이 지향하는 궁극적인 미래상은 상당한 공통점을 보이고 있다.

우선, 양국에서 다같이 농촌정비의 대상부문으

로 생활환경, 취업여건, 토지이용 그리고 커뮤니티의 4가지를 들고 있다. 도시에 견주어 손색없는 서비스수준을 확보하고, 다양한 취업기회와 소득원을 갖추며, 계획적인 토지이용체계를 구축하여 농촌을 난개발로부터 보호하고, 커뮤니티를 활성화한다는 4가지 기본목표에는 차이점이 없다.

서비스수준의 측면에서 보면, 양국에서 다같이 의료, 교육, 소매 등 기초서비스의 보장을 강조하고 있다. IT기술을 적극 활용한다든가, 학교 또는 교회시설의 다목적 활용, 농협 또는 커뮤니티가 출자하는 소매점 운영 등을 방안으로 제시하고 있는 점도 양국에서 공통적이다.

농촌경제에 대해서는 양국 모두 국민 식량의 공급원으로서 농업의 가치를 과소평가 할 수는 없으나 농업만으로는 농촌의 발전을 기대하기 곤란하다고 보고 있다. 앞으로의 농업은 시장의 변화와 소비자의 기호에 맞추어 고부가가치화 하여야 하고 농업이외에 지역자원을 활용한 다양한 산업들을 육성해 나가야 한다고 지적한다.

토지이용에 대해서는 공통적으로 다양한 계획의 수립과 토지이용 조정을 위한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야 한다고 보고 있다. 일본에서는 법률이외에 경관조례를 비롯하여 지방자치단체의 독자적인 토지이용조정제도 마련과 커뮤니티 차원에서의 마을가꾸기계획을 적극 장려하고 있으며, 영국에서도 지방 의회를 중심으로 마을계획의 수립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커뮤니티에 대해서도 기본적으로 같은 입장을 취하고 있다. 인구의 유출로 커뮤니티의 붕괴가 우려되고 있는 일본에서는 특히 이를 강조하면서 2001년부터 마을가꾸기유신(維新)사업이라는 커뮤니티 지원사업을 추진하기 시작하였다. 인구밀도가 낮고 조방적 주거형태를 나타내는 농촌의 주거특성

상 행정의 역할에는 한계가 있기 마련이어서, 커뮤니티가 이를 보완하고 지역발전의 구심적 역할을 하도록 기대하는 것이다. 풀뿌리민주주의가 발달한 영국의 경우에는 일찍부터 커뮤니티가 발달하여 왔으나 인구구성의 이질성 등으로 그 역할이 약화되고 있다고 보고, 커뮤니티의 강화를 위한 정부지원의 강화 등을 농촌백서에서 권유하고 있다.

마지막 공통점은 양국이 모두 도농통합적 생활권전략을 채택하고 있다는 점이다. 일본에서는 「다자연거주지역의 창조를 위한 지침」에서 중소도시와 배후농촌지역이 상호연계하여 권역을 형성할 것을 분명히 밝히고 있다. 종래의 정주생활권 등은 국가가 권역을 설정하였지만 다자연거주지역에서는 권역의 형성 자체를 지자체의 자율에 맡기고 있는 점이 특징적이다. 영국에서는 특히 서비스공급 차원에서 중심도시와 배후도시간 기능분담을 강조하고 있다.

3. 한국 농촌지역의 SWOT와 정책과제

1) 농촌지역의 가능성

한국의 농촌지역은 도시지역과 비교하여 강 약점 및 기회 위협요인들을 가지고 있다. 가장 큰 강점은 도시지역보다는 풍부한 토지자원과 쾌적한 자연환경, 생태공간을 확보하고 있다는 점이며, 가장 큰 약점으로는 생활에 필요한 기초 시설이 도시 지역에 비해 열악하고 고급의 교육, 의료, 문화 서비스 등을 받을 기회와 일자리가 제한되어 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국민들의 자연지향적, 건강지향적 가치관이 확산되면서 농촌이 갖는 강점은 계속 강화될 것이 분명하다. 하지만 농촌의 약점은 결코 극복할 수 없는 것이 아니다. 도시지역이 지난 편리한 정주여건

의 편익이 당분간 지속될 것이라는 점은 농촌지역의 공동화(空洞化)를 부추기는 하나의 위협요인이 될 수는 있으나, 교통 및 정보통신기술(ICT)의 발전과 더불어 기초 시설 및 서비스 수준 제고가 이루어진다면 농촌지역이 전원생활공간으로서, 신산업공간으로서, 여가·휴양공간으로서 충분한 각광을 받게 될 것이라고 짐작해 볼 수 있다. 특히 고속 교통시대로의 진입, 정보통신기술의 혁신 등은 농촌지역의 약점과 위협요인을 상당 부분 해소할 것으로 기대된다.

2) 도농간 ‘연계성의 경제’와 정책과제

도농연계시대의 농촌은 도시와의 ‘연계성의 경제(Economy of Linkages)’를 활용해야 한다. 연계성의 경제는 각각의 지역이 갖고 있는 내부자원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이 보유한 자원을 활용하고 연결시킴으로써 생겨나는 경제성이다. 또한 연계성의 경제는 복수주체가 존재하고 복수주체간의 연결이 지식, 정보, 기술 등의 다중이용에 의해 유발되는 경제성이다.

도농간 연계에 의한 새로운 지역개발방식은 여러 주체가 공동의 목표와 공동의 전략을 추진하기 위해 통합적 지역으로 바뀌면서, 통합적 지역간에 새로운 연계가 맺어지고, 통합적 지역내에서 또한 개별 지역간에 고도의 연계가 맺어져 다양한 시너지효과가 발생하는 통합형 분업방식이라고 할 수 있다.

연계성의 경제에 기초할 때 미래의 농촌지역은 농업생산 이외에도 다양한 기능을 수행할 것이 요구된다.

첫째, 농촌은 농업뿐만 아니라 다양한 산업이 공존하는 복합산업공간으로 기능하여야 한다. 둘째 농촌주민뿐만 아니라 도시민에게도 개방된 양질의

주거 공간으로 자리 매김 되어야 한다.셋째, 자연생태계의 순환 질서가 유지·보전되는 자연생태공간으로 기능하여야 한다. 넷째, 전 국민이 휴식을 통해 생활의 활력소를 얻을 수 있는 여가·휴양공간으로 기능하여야 한다. 마지막으로, 우리 고유의 문화를 간직하고 유지하는 전통 문화 유산의 전승·보전 공간으로 기능하여야 한다. 농촌이 이러한 다원적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농촌개발 전략도 바꿔야 해야 한다. 무엇보다도 농촌은 도시민에게 열려진 공간이 되어야 한다. 도시민을 위한 주거지 개발, 농촌관광, 도·농 교류 등 농촌개발의 정책 대상이 도시민에게까지 확대되어야 함을 의미한다. 다음으로 농촌지역 정비에 대한 지속적 투자 확대와 더불어 중심도시와 배후 농촌을 하나의 권역으로 묶는 개발단위 설정이 필요하다. 기초 시설 공급과 서비스 수준 향상을 위해서 농촌지역 정비에 대한 지속적 투자 확대는 불가피하다고 하겠으나 농촌지역의 정주체계가 급격히 변화하고 있는 상황에서 모든 농촌지역에 대한 균질적 투자는 비효율성, 하향평준화를 가져올 뿐이다. 농촌의 과소화가 갈수록 심화되는 상황에서 중심도시의 개발을 통해서 배후 농촌의 정주기반을 강화하는 전략이 병행되어야 할 것이다.

나아가 지역 주민의 자발적인 참여 내지는 파트너십(Partnership)에 바탕을 둔 농촌개발사업이 확대되어야 한다. 중앙정부 주도의 하향식 개발 방식에서는 시설물의 배치와 같은 하드웨어적인 사업은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을지 몰라도 설치된 시설의 운용과 같은 소프트웨어적 사업의 추진은 비효율적이다.

그리고 지역자원을 활용한 경제적인 프로그램이 필요하다. 농촌의 활성화와 정주기반 강화는 궁극적으로 농촌지역에서 얼마만한 소득을 올릴 수 있으며 그를 위해 어느 정도 고용기회가 확보

되느냐에 달려 있다. 특히 농촌의 자원을 활용한 경제적인 이익의 실현 등이 농촌개발의 새로운 전략으로 채택되어야 한다. 그런 투어리즘은 그 대표적 예이다.

마지막으로 환경과 경관을 고려한 환경친화적 농촌정비전략이 필요하다. 농촌지역의 가장 큰 잠재적 강점인 양호한 생태환경과 자연경관의 유지·보전을 위해 환경친화적 정비를 추진하여야 한다. 농촌지역의 환경과 경관을 훼손하지 않으며 나아가 좋은 환경과 경관을 복원, 창조할 수 있는 정비 제도, 정비 기술 및 정비 사업이 구상되고 적용되어야 한다. 특히 농촌지역은 생활공간, 산업공간, 자연공간 등이 중첩, 누적되는 공간이므로 이러한 공간적 특성들이 제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일체적 정비를 지향함으로써 농촌적 환경 및 경관의 장점을 취할 수 있다는 점이 고려되어야 한다.

4. 농촌의 새로운 발전 전략

종래와 같이 도시에 종속적인 농촌이 아니라 도시에서 얻을 수 없는 독특한 녹색공간과 쾌적자원을 농촌이 공급하고 도시민과 농민의 구분이 없이 함께 어울려 살아가는 새로운 공동체적인 삶의 터전으로서의 농촌으로 거듭 태어나야 한다. 유럽의 경우 “농촌지역(Rural Area)은 더 이상 농업(Agriculture)이라는 산업과 동일시 될 수 없다”는 패러다임 속에서 농촌의 토지이용과 직간접으로 관련된 농촌발전에 집중하고 있음을 우리도 냉엄하게 직시해야 할 때가 되고도 남았다.

도시와 하나의 공동체인 농촌의 새로운 역할과 비전에 부합하는 새로운 농촌발전 전략이 필요하다. 다음의 여섯가지가 핵심이 될것으로 보인다.

1) 도시계획 수준의 상세한 농촌 토지이용계획의 수립·추진

농촌은 양질의 저렴한 택지와 산업단지, 여가공간을 제공함으로써 도시와 농촌 쌍방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도농통합적 차원에서 '계획 없이 개발 없다'라는 대전제 아래 도시지역과 비도시지역을 통합하는 계획체계의 일원화가 필수적이다.

농촌의 개발대상지역에 대해서는 선진국에서 보편적으로 채택하고 있듯이 도시계획수준의 상세한 토지이용계획을 수립한 다음 주거지역, 산업지역, 관광휴양지역 등으로 개발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 상세하게 계획된 공간단위를 대상으로 개발하는 '계획적 공간단위 개발방식(Planned Unit Development)'을 지금부터 철저히 시행함으로써 질서있는 농촌토지이용이 강구되어야 한다.

2) 도시-소도읍-농촌 연계 생활권의 개발

농촌이 도시와 고립되어서는 견실한 발전을 기대할 수 없다. 농촌지역에 인구정주기반을 확충하고 지역발전을 유도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인근 대 중소도시와 소도읍과 농촌이 신경망처럼 연계되어 발전하는 새로운 도농연계 생활권을 형성하는 것이다. 농촌지역이 도시와 통합된 생활권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일차적으로 소도읍이나 중소도시를 주변 농촌지역의 중심지로 과감히 육성해야 한다. 도농광역생활권의 경제와 생활서비스의 거점인 소도읍과 중소도시의 개발을 촉진하고 도시간, 도농간 교통과 정보통신망을 확충해야한다. 독일에서와 같이 중심지체계에 근거한 도농연계 발전정책이 추진되어야 한다.

이와 함께 도농간 복지전달체계도 이제는 주민 중심으로 전환되어야 한다. 가령 기초적인 의료 서비스의 경우 도시에 있는 의료기관으로 주민이 직접 찾아가기보다는 기초의료시설이 장착된 특수차량을 타고 도시의 의료진이 주민에게 찾아와 현장순회 진료하는 '움직이는 의료전달체계(Mobile Medical Service Delivery System)'가 도농연계 생활권 내에서 도입되어야 한다.

3) 주민주도의 상향식 농촌개발방식의 도입

농촌 개발정책의 계획과 집행과정에서 농업인과 농업단체 등이 적극 참여하는 상향적인 방식이 도입되어야 한다. 정부의 간섭과 통제의 틀에서 벗어나 주민의 자율과 참여의 틀로 가야한다.

농촌 개발과정에 지역사회를 기반으로 한 산학관 파트너십을 통한 방식은 미국을 비롯한 선진국에서 정착 단계에 있다. 특히 EU의 리더(LEADER)프로그램은 자발적인 농촌 지역개발 프로젝트를 지원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이는 지역 단위에서 여러 경제 주체들이 창의적으로 발전계획을 수립하고 수행하는 것을 지원하는 상향적, 참여적 특성을 지닌다. 이를 벤치마킹한 상향적인 농촌 개발프로그램이 우리의 경우 절실히다.

4) 지역특성에 맞는 산업군집(Cluster)의 육성

농촌지역이 도시지역과 통합적 생활권체계를 형성하는 가운데 지역의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농촌도 지역별로 특정산업에 있어 군집시스템을 만들어가야 한다. 특정의 전략적인 산업을 중심으로 하여 관련 제조업과 서비스 산업, 인력양성 및 기술관련 기관이 도농 생활권내에서 군집체계로 입지하는 방식으로 개선되어야 한다. 농어촌의 산업군집은 농·어업 부문과 관련하여 만들 수 있을 것이며 인근도시지역의 산업부문과 연계하여 특정업종에서의 도시형 군집을 만들어 갈 수 있을 것이다.

미국과 유럽에서와 같이 인근 도시의 관광산업

발전과 연계하여 포도 등의 과일산업을 중심으로 하는 산업군집으로 육성할 수 있을 것이다.

지역 성격에 따라 유형화하고 유형별로 특성 있게 개발함으로써 농촌 지역마다 산업적 개성을 유지하면서 전체적으로는 다양성을 보유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 지역특성에 따라 대도시 균교형, 중소도시 인접형, 그리고 농업 중심형 등으로 유형화하고 유형별로 특성 있게 개발해야한다.

5) 도농 교류확대 프로그램의 추진

농촌지역이 새로운 발전기회를 갖도록 하기 위해서는, 농촌의 풍부한 자연과 문화 등의 자원을 활용하여 도농교류를 촉진할 수 있는 한국 특유의 새로운 고향산업 프로그램을 추진해야한다.

한국 농촌 특유의 자연경관 전통역사, 생활문화를 매개로 한 다양한 도농교류활성화 정책이 추진되어야 한다. 농수산물 판매, 농수산물 가공 특산품 산업은 기본적인 고향산업으로 그 활성화를 위해 농수산물 가공 판매 관련 창업지원체제의 구축과 창업보육지원센터의 설치, 농촌지역 내 고용창출 및 소득증대에 대하여 고용 설비보조금 지원 등

기업지원제도의 도입 등이 필요하다. 임대차 활성화를 위한 농지소유규제 완화, 농업회사법인에 대한 비농업인 출자제한의 완화 등을 통하여 도시자본의 농촌유입도 촉진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한국형 고향산업으로 향후 각광을 받을 수 있는 부문은 환경적 전진성에 기초한 그린투어리즘 산업이다. 이를 육성하기 위해서는 그린투어리즘 관련 자연 농업체험 및 체험민박 등 종합적인 정보제공과 검색 시스템의 구축, 농가민박 지도자의 육성과 인재뱅크의 구축 등이 요망된다. 농어가 민박업에 대한 질적 관리를 강화하는 동시에 진입의 규제를 없애야 한다. 팬션업에 대한 저리용자 등의 인센티브도 적극 강구되어야 한다. 그리고 농촌에서의 그린관광산업을 체계적으로 전담하는 주민주도의 전국적인 조직체도 운영되어야 한다.

그린투어리즘 산업과 연계하여 장수산업 또는 농어촌형 바이오 건강산업도 한국형 고향산업으로 육성해야한다. 우리나라의 경우 공기 좋고 물 좋은 산골짜기와 연안지역에 장수마을이 입지하고 있는 경향이 있음이 최근 밝혀졌다. 이들 지역에는 건강에 도움이 되는 녹색자원이 풍부하다. 미래 건강보양지역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새로운 농촌 발전 모델도 창조해야한다. 도농교류활성화를 위해 '고향집갓기 운동'이 전개되어야 한다. 이는 도농교류프로그램의 중요정책이 되어야 한다. 도시의 복잡한 회색 빛 생활에서 탈출하여 녹색공간인 농촌에서 제2의 주택(Secondary House)을 장만하여 주말과 늘어나는 휴가기간을 여유있고 쾌적하게 보내는 새로운 주거장소로서의 농촌이 더욱 중시될 것이다. 이를 지원하기 위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

향후 재택근무의 활성화는 농촌의 정주공간기능을 재점화시킬 것이다. 농촌에 머물면서 고속통신망을 이용한 재택근무가 인기를 끌면서 젊은이들의 농촌정



▲ 도농교류를 통해 농업·농촌의 재인식 기회로…

주에 새로운 계기가 마련될 것이다.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농촌에 고속정보통신기반이 구축되어야 하고 저렴하고 품격있는 전원주택단지도 개발해야 한다.

농촌은 땅값이 싸기 때문에 선진국에서처럼 도시와 인근한 농촌 지역에 문화시설, 스포츠 센터, 연수시설, 영화관, 음악관 등을 집합시킨 문화레포츠 단지를 개발함으로써 농촌지역이 도시보다도 더욱 쾌적하고 품격있는 지역으로 전환될 수 있다. 이러한 다양한 도농교류확대프로그램이 주민의 적극적 참여하여 지역마다 산학간 파트너십을 통해 특성있게 추진하면 농촌발전의 새로운 바람이 일어날 것이며 도시인구가 농촌으로 서서히 U턴 될 수 있을 것이다.

6) 농촌 정책의 총괄 · 조정기능의 강화

지금까지 농업에 치중한 농정의 추진으로 말미암아 막상 농촌 개발정책은 사실 사각지대로 남아 있었다고 할 수 있다. 그간 농촌 정책은 농림부, 행정자치부, 건설교통부, 산업자원부, 환경부 등으로 다

기능화되어 제대로 통합되지 못했다. 지금 까지 주무부처도 모호했다. 이 때문에 중앙정부에서도 체계적인 정책을 제대로 한번 추진해보지도 못했다. 지금부터는 농촌개발정책이 범정부차원에서 그리고 일관되게 추진되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선 상향식 농촌 발전방식의 도입과 함께 중앙정부내에서 농촌정책의 총괄, 조정기능이 강화되어야 한다. 농촌 정책에 대한 확실한 주무 부처가 정립되어야 한다. 구미 선진국을 보더라도 농촌(Rural Affairs)정책은 농업정책의 총괄부처인 농림부에서 하고 있다. 우리의 경우도 세계적인 추세에 부응하여 농림부의 농촌개발정책 총괄 조정기능의 강화를 도모해야한다. 향후의 농촌 발전이 도시와의 긴밀한 연계속에서 이루어 져야 하는 만큼 현 농림부의 농촌개발정책 기능을 확대 개편하여 종합적인 도농통합개발정책의 기획과 조정기능을 갖도록 정비해가야 한다. ◎

(편집자 주 : 위 글은 국토연구원 박양호 선임연구원의 「도농연계시대의 농촌발전전략」의 내용 일부를 발췌 요약한 내용임)

◆ 연회비 및 농업기술회보발행 후원금 납부안내 ◆

계좌번호 : 067-01-224657

은행명 : 농협

예금주 : 전국농업기술자협회

상기와 같은 방법으로 협회본부 및 각지회로 납입하여 주십시오. 또한 통일·동심·평생회원들도 협회를 사랑하는 마음에서 「농업기술회보」의 발행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농업기술회보발행 후원금”을 본회로 보내주시면 잡지발간에 유용하게 쓰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회보발행기부금』 2·3월 기탁자

이희석(통일회원) 제주 제주시 오라2동 이만원
김형식(통일회원) 전남 장성군 동화면 일만원

김OO(통일회원) 광주 남구 진월동 십만원
이기범(통일회원) 충남 공주시 신풍면 삼만원

『농업기술회보발행기부금』을 보내주신 회원분들에게 감사한 마음을 전하며 「농업기술회보」발행에 유용하게 쓰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사단법인 전국농업기술자협회